

“신뢰받는 감사원, 국민과 함께 합니다.”



감사원

바른감사
바른나라

수신 고용노동부장관(산재보상정책과장)

(경유)

제목 심사청구의 처리

1. 귀 부에서 2019. 8. 26.(산재보상정책과-4076) 우리 원에 보내신 청구인 주식회사 ■■■■■ 건설(대표이사 ■■■■■)의 "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"를 「감사원법」 제46조 제2항에 따라 심리하고 불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처분청에도 위 결정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2. 청구인이 이 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장 사본을, 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문 사본을 감사원(심사2담당관)으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심사결정서 등본 1건 1부. 끝.

감사



부감사관



심사2담당관



협조자

시행 심사2담당관-602 (2019. 11. 6.)

접수

우 0305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(삼청동 25-23)

/ www.bai.go.kr

전화번호 ■■■■■

팩스번호 ■■■■■

/

/ 비공개(1. 6)

감사원

심사결정

분류번호 2019-심사-566

제목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

청구인 주식회사 [REDACTED] 건설(대표이사 [REDACTED])
[REDACTED]

대리인 주식회사 [REDACTED] 건설 회계부 차장 [REDACTED]

처분청 근로복지공단 [REDACTED] 지사장

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

이유

1. 원 처분의 요지

가. 청구인 소속 근로자 [REDACTED](이하 “재해자”라 한다)은 2018. 10. 23. 15:50 경 “세종 [REDACTED] 신축공사”(이하 “이 사건 공사”라 한다) 현장¹⁾에서 벽돌이 좌측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(이하 “이 사건 사고”라 한다)가 있은 후 같은 해 10. 24. “좌측 발등의 타박상”(이하 “이 사건 상병”이라 한다)을 진단받아 같은 해 11. 29. 처분청에 요양급여(구분: 최초요양) 지급을 신청하였다.

나.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재해조사,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2019. 2. 21.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(구분: 최초요양) 지급을 승인 결정(이하 “이 사건 처분”이라 한다)하였다.

1) [REDACTED] 소재

2.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

가. 청구 취지

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.

나. 청구 이유

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가 없고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일주일 후 갑자기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바,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.

3. 우리 원의 판단

가. 다툼

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.

나. 인정사실

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.

1) 재해자는 청구인에게 2018. 10. 23.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청소 및 폐기물 운반작업을 수행하다가 같은 날 15:5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.

2)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재해자 등 관련자의 진술 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 내용은 [표 1]과 같다.

[표 1]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관련자 등의 진술 및 조사 내용

구분 (작성자)	내용	날짜
요양급여신청서 (재해자)	▶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벽돌이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	2018. 11. 29.

구분 (작성자)	내용	날짜
보험가입자 의견서 (청구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체 조사결과 사고발생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음 ▶ 이 사건 사고 후 재해자가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고 정상적인 근무를 한 점, 처음에 산재처리를 요구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 	2019. 1. 14.
진술서 (동료근로자 A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18. 10. 23. 재해자와 같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청소 및 폐기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음 ▶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음을 확인함 	2019. 1. 27.
진술서 (동료근로자 B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청소 및 폐기물을 운반작업에 3명씩 한 조로 인원 배치를 하여 사고 발생 시 다른 근로자가 이를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인데, 재해자와 한 조로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음 	2019. 1. 5
진술서 (동료근로자 C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고 작업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였는데 어떤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	2019. 2. 18.
재해조사서 (처분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고(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재해자 의견서상 공통진술임),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[■] 영상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기록상 이 사건 사고가 기재된 점을 토대로 재해자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	2019. 2. 21.

3)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은 [표 2]와 같다.

[표 2]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

구분 (의료기관명)	내용	날짜
의무기록지 ([■] 영상의학과 의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내원일시: 2018. 10. 23. ▶ 오늘 16:0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	2018. 10. 23.
진단서 ([■] 병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진단명: 좌측 발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▶ 소견: 재해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 중이고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향후 약 2주 이상의 안정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함 	2018. 10. 26.

구분 (의료기관명)	내용	날짜
자문의 소견서 (처분청)	▶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. 요양기간이 타당하고 이 후 종결되며 기간 내 취업치료 가능	2018. 12. 24.
자문의 소견서 (처분청)	▶ 재해 경위과 이 사건 상병 간 인과관계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통원 2주 및 취업치료 가능	2019. 1. 17.
소견조회 ([REDACTED] 병원장)	▶ 재해 경위: 2018. 10. 23.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벽돌이 발등에 떨어짐 ▶ 외상에 의한 수상이며 영상검사 시행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함	2019. 2. 1.
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(처분청)	▶ 통원 2주 후 종결 타당하고 취업치료 가능 ▶ 통원 2주 타당하며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인정 ▶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되고 통원기간 2주가 타당하며 통원취업치료 가능 ▶ 통원 2주 인정,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인정	2019. 1. 30.

다. 관계 법령

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(이하 “산재보험법”이라 한

다)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[별지] 기재와 같다.

라. 판단

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따르면 “업무상의 재해”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,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사고로 부상·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,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.

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·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

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.²⁾

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, ① 인정사실 “2)항” 및 “3)항”的 내용과 같이 재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재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수상 경위가 일치하는 점, ②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가 없다 하더라도 인정사실 “2)항”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의견서상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재해자가 스프레이 패스와 봉대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진료기록지 등에 기재된 수상경위 등을 통해 이 사건 사고의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점, ③ 인정사실 “3)항”的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자문의사에게 자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자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「감사원법」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)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두19147 판결

2019 . 11 . 06 .

이는 등본임

서기 2019년 11월 6 일

감사원운영



[별지]

관계 법령

□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- 제5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1. “업무상의 재해”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.
 - 2.~7. (생략)
-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·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 다만,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1. 업무상 사고
 - 가.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 - 나.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
 - 다.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
 - 라.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
 - 마.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
 - 바.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 2. (생략)
- ② 근로자의 고의·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그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

의 재해로 본다.

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

○ 제42조(자문의사)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·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(공단의 직원인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)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.

(이하 생략)

○ 제43조(자문의사회의)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·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자문의사회의를 둔다.

②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으로 구성한다.

③ 자문의사회의는 공단의 자문에 응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(이하 생략)

□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」

○ 제21조(요양급여의 결정 등)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.